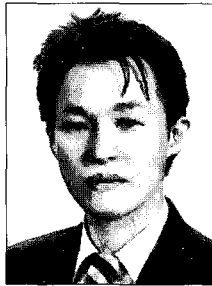


# 원유가 현실화의 본질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낙농정책은 누가 뭐래도 생산자대책이다. 우유는 가장 민감한 신선식품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원유는 과부족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계절적인 편차까지 고려한다면 일률적인 탁상공론과 단기처방으로 원유수급대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FTA에 대비한다는 낙농정책 하면 언뜻 떠오르는 내용으로 전국(연합)쿼터제, 국내원유 생산목표 200만톤, 가공유지원대책들이다. 하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낙농진흥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낙농진흥회의 존폐여부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현재와 같은 대책과 땀질처방식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설익은 물가잡기는 낙농품도 예외가 아니다. 구제역 여파로 인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담시고 전탈지분유 3만톤을 포함한 유제품의 무관세 물량을 대폭 확대하였다. 원유로 환산한다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물량보다 몇 배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이다. FMD(구제역)로 인한 위기 속에 역설적으로 유업체만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형국인 셈이다.

반면 낙농가의 유사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사료값 폭등 속에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이상기후 여파와 구제역 백신 문제들은 낙농목장 환경을 날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아무튼 FTA 개방의 파고 속에 낙농가들의 삶의 질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당연히 낙농업은 축소지향으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낙농업에 대한 이해부족, 목표상실이 빚어낸 결과다.

최근 원유가 현실화 논의가 한창이다.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조정은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잘못된 통제로 인해 원유가격 논의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수요자인 유업체가 이번에도 낙농가의 정당한 원유가 현실화 논의 방향에 과거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8년도를 회상해보면 원유가 현실화 이후에도 낙농가들의 경영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최근 농협에서 조사한 유사비는 원유가 현실화 이후에도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고 금년 들어서는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에 하나 그때 원유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면 낙농업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을 거란 반증이다.

정부는 원유가 현실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정부기조에 충실하기 위해 혹여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면 결국 소탐대실이다. 물은 아래로 흘러야 한다. 낙농가가 살아야 유업체도 살고 기초식품인 우유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본질을 외면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낙농가의 목줄을 죄면 답은 뻔하지 않은가. ☹

